【 2015.03.19(목) 강원일보 】

표준시장단가 체계 확대 개편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300억원 이상 정부 및 지자체 발주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저가심사도 표준시장단가체계가 적용된다.

조달청은 최근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시장단가 도입에 따라 국가·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18일 이후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발표하는 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각 조항의 '실적공사비'라는 용어는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돼 입찰공고는 물론 심사과정에서도 실적공사비는 사라지게 됐다.

다만 현실단가와 괴리가 컸던 실적단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투찰 금지조항은 유지된다. 하위윤기자

【 2015.03.19(목) 강원도민일보 】

강릉 복선철공사 지역업체엔 '그림의 떡'

특수공법·전문기술 적용… 참여 여지 줄어
업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해야"

사업비 4874억원이 투입되는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강릉구간 공사에 정작 강릉 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18일 강릉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복선전철 공사와 관련, 강릉지역에서는 제10공구(성산면 어흘리~대관령면 횡계리·총 연장 9.4㎞·총 사업비 1371억원)와 제11-1공구(성산면 어흘리~구정면 제비리·4.1㎞·934억원), 제11-2공구(구정면 제비리~청량동·9.4㎞·1217억원), 제11-3공구(청량동~강릉역·3.9㎞·1352억원) 등 4개 공구 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올해 도심구간 지하화 공사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강릉구간은 도심 지하화 줄다리기로 인해 타지역 구간보다 공사진도가 늦었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17년까지 공사에 박차를 가해 올림픽 전 개통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관령~강릉역까지 4개 공구 전구간에서 공사가 더욱 활기를 띨 예정이지만, 정작 강릉건설업체들에게는 '남의 일'인 소외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원통형 전문 터널 굴착장비를 이용해 지하 10m 이상 깊이에서 터널을 파는 강릉 도심구간의 '실드 TBM공법' 처럼 각 공구별로 특수공법과 전문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다 철도공사의 경우 택지개발 등과 달리 단일 공사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지역 업체 참여 여지가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저가 입찰을 통해 각 공구별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더라도 공사단가를 맞추지 못해 제풀에 꺾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덤프트럭 등 일부 중장비가 투입되고는 있으나, 각 공구별로 20~30대에 불과해 지역 건설경기 부양과는 거리가 멀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는 특단의 견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순근 일반건설협회 강릉시협의회장은 "대형 SOC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상황이 심화된다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호황 속 불황'이라는 역기능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제고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각 공구별 관계자들은 "철도공사 자체가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기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릉/구정민 koo@kado.net